

Vol. 3

주간

## 농업농촌식품동향

2020. 1. 20.

### ■ 정책동향

- 2019년 고용동향 및 2020년 일자리 정책방향
- 2020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2020 정부 부처 업무보고 계획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 2019년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 발족
-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
-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강화로 개인재산권 보호
- 쌀가공식품 2019년 수출액 1억 달러 달성
-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 축산계열화사업의 관리와 축산농가 권익보호 강화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등

### ■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 2020년 ICT 이슈와 9대 트렌드 전망
-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미국 기후변화 농업정책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생산자조직 발전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제5기 중산간지역등직불제 시행
- 언론 동향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주요 동향

### ■ 통계·조사

-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 FAO 식량가격지수(2013년~2019년)

## 정책동향 2019년 고용동향 및 2020년 일자리 정책방향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1.15.)

### □ 개요

- [관계부처 합동, 2019년 고용동향 및 2020년 일자리 정책방향 발표, 2020.1.15.] 2019년의 고용 회복세가 올해에도 더 공고화되고, 확실히 착근될 수 있도록 △민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촉촉한 고용안전망 마련

### □ 2019년 고용 동향

- [취업자] 2019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0.1만 명 증가\*
  - ※ 취업자 증감(전년 대비, 만 명): (2015)28.1 → (2016) 23.1 → (2017) 31.6 → (2018) 9.7 → (2019) 30.1
- (제조업)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폭 확대\*
  - ※ 수출 증감율(전년 대비, %): (2017) 15.8 → (2018) 5.4 → (2019.1/4) △8.5 → (2/4) △8.6 → (3/4) △12.3 → (4/4)△11.7
  - ※ 제조업 취업자(전년 대비, 만 명): (2015) 14.6 → (2016) △2.1 → (2017) △1.8 → (2018) △5.6 → (2019) △8.1
- (건설업) 건설투자 부진 등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 전환\*
  - ※ 건설기성(전년 대비, %): (2015) 5.0 → (2016) 15.4 → (2017) 10.5 → (2018) △5.3 → (2019.1~11월) △7.3
  - ※ 건설업 취업자(전년 대비, 만 명): (2015)2.5 → (2016) 1.5 → (2017) 11.9 → (2018) 4.7 → (2019)△1.5
- (서비스업)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 견인
  - ※ 서비스업 취업자(전년 대비, 만 명): (2015) 20.8 → (2016) 29.9 → (2017) 20.9 → (2018) 5.1 → (2019) 34.8
  - ※ 보건복지업 취업자(전년 대비, 만 명): (2015) 7.3 → (2016) 8.0 → (2017) 6.1 → (2018) 12.5 → (2019) 16.0
  - ※ 숙박음식 취업자(전년 대비, 만 명): (2015) 7.7 → (2016) 9.6 → (2017) △0.3 → (2018) △4.5 → (2019) 6.1
- [실업자] 전체인구 증가(+32.2만 명)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1.0만 명) 하며 106.3만 명 기록, 실업률은 3.8%이며, 청년실업률이 크게 하락\*

## ㉔ 정책동향

- ※ 실업자(만 명): (2015) 97.6 → (2016) 100.9 → (2017) 102.3 → (2018) 107.3 → (2019) 106.3 / 전년 대비 증감(만 명): +3.7, +3.4, +1.4, +5.0, △1.0
- ※ 실업률(%): (2015) 3.6 → (2016) 3.7 → (2017) 3.7 → (2018) 3.8 → (2019) 3.8
- ※ 연령별 실업률 증감(전년 대비, %p): <15세 이상 전체> 0.0 <15~29세> △0.6 <30대> △0.1 <40대> △0.2 <50대> 0.0 <60세 이상> +0.3 <65세 이상> +0.3

- [창년] 청년층(15~29세)은 인구 감소\*(△8.8만 명)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전환(4.1만 명), 청년층 고용률은 43.5%(+0.8%p)로 2006년 이래 최고치, 실업률은 8.9%(△0.6%p)로 201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 기록

- ※ 청년층(15~29세) 인구(전년 대비, 만 명): (2015) △1.5 → (2016) △1.7 → (2017) △8.1 → (2018) △13.3 → (2019) △8.8
- ※ ※ 청년층(15~29세) 취업자(전년 대비, 만 명): (2015) 6.3 → (2016) 4.3 → (2017) △0.1 → (2018) △0.3 → (2019) 4.1

## ㉕ 평가 및 대응

- [평가] 2019년 고용은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 흐름 시현

- 취업자 증가\*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18년 9.7만 명의 3배 수준인 30.1만 명을 기록하며 V자형 반등 양상

- ※ 취업자 증가(전년 대비, 만 명): (2018 연평균) +9.7 → (2019 연평균) +30.1
- ※ 인구 및 취업자 증감(전년 대비, 만 명, 2001~2015년 평균 → 2019년 연간): <15세 이상 인구> 47.0 → 32.2, <15~64세 인구> 26.0 → △0.5, <전체취업자> 33.4 → 30.1

- 고용률\*은 15세 이상, 15~64세 모두 역대 최고 수준 기록, 전체 실업자\*\*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하며 실업률은 보합

- ※ 15세 이상 고용률(%): (2017) 60.8 → (2018) 60.7 → (2019) 60.9(+0.2%p) <역대최고치, 1997년 동률>
- 15~64세 고용률(%): (2017)66.6 → (2018)66.6 → (2019)66.8(+0.2%p) <통계발표 이래(1989년~) 최고>

- ※ ※ 실업자(만 명): (2013) 80.8 → (2014)93.9 → (2015)97.6 → (2016)100.9 → (2017)102.3 → (2018)107.3 → (2019)106.3

-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상용직 근로자 비중\* 역대 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 12년 만에 최대폭 증가, 청년·여성·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여건\*\*\*\*도 개선

- ※ 상용직 비중(%): (2015) 65.5 → (2016) 66.4 → (2017) 67.4 → (2018) 68.6 → (2019) 69.5
-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만 명): (2016) 34.9 → (2017) 30.6 → (2018) 35.8 → (2019) 51.0
- ※ ※ ※ 청년 고용률 43.5%(+0.8%p, 2006년 이후 최고치), 여성 고용률 51.6%(+0.7%p, 역대 최고치), 65세 이상 고용률 32.9%(+1.6%p, 통계발표 이래(1989년~) 최고)

## ㉔ 정책동향

- 다만, **40대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 확대

※ 40대 고용률(%): (2015) 79.1 → (2016) 79.3 → (2017) 79.4 → (2018) 79.0 → (2019) 78.4(△0.6%p)

※※ 제조업 취업자 증감(전년 대비, 만 명): (2015) 14.6 → (2016) △2.1 → (2017) △1.8 → (2018) △5.6 → (2019)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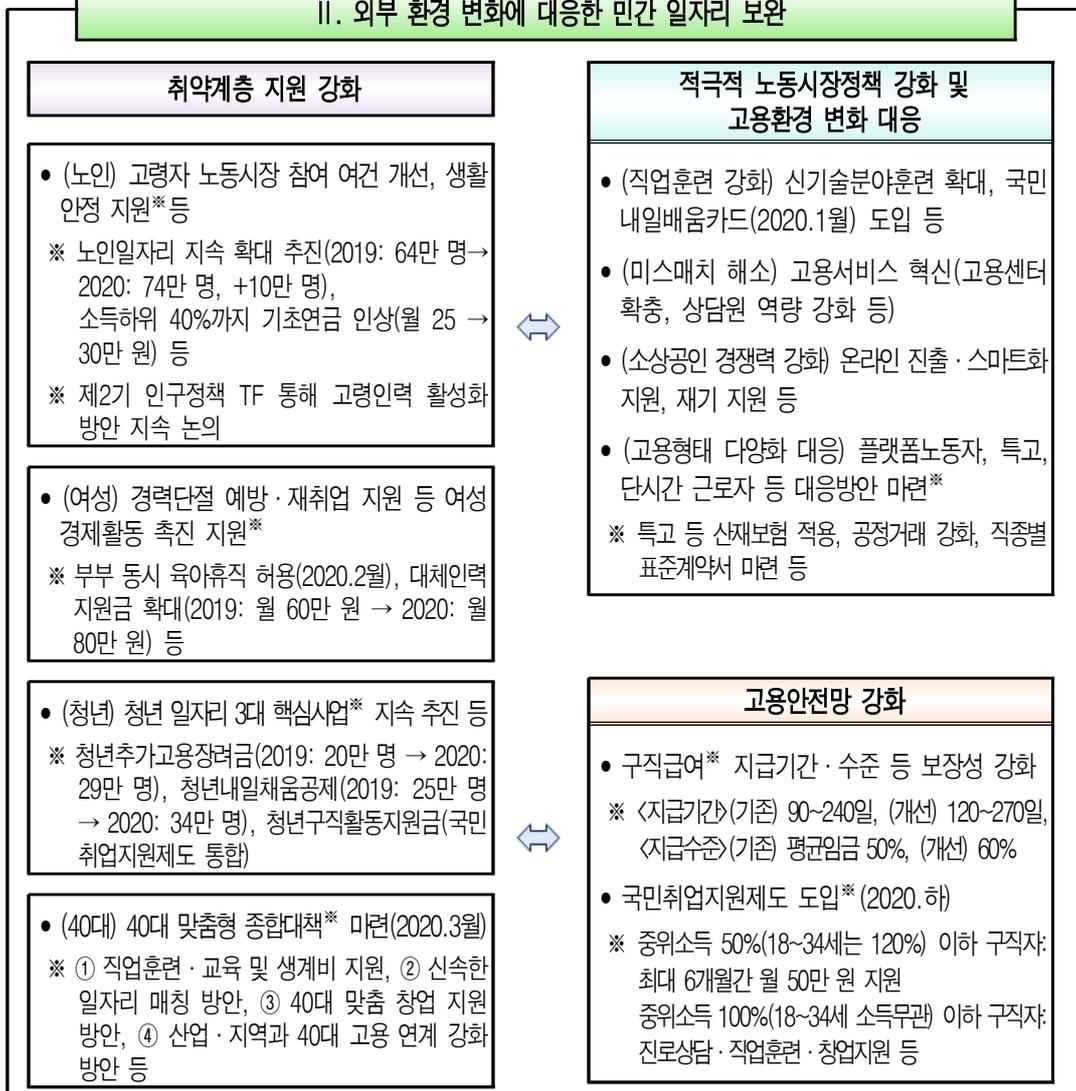
○ **[대응]** 고용 회복 흐름이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중장기 구조개혁·미래성장동력 발굴** 등도 차질 없이 추진

## ㉕ 2020년 일자리 정책방향

I. 투자 활성화 + 혁신성장 + 규제혁신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능력 강화

+

II.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민간 일자리 보완



◆ 총괄정책 동향

## 2020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자료 : 청와대(2020.1.14.)

- [청와대, 2020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개최, 2020.1.14.]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00여 명과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민생경제, 정치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혀
  - (주요 내용) △남북관계 진전, △검찰수사와 검찰 개혁, △정부와 국회의 협치, △경제정책, △부동산 투기 문제, △지방분권 정책 및 인구절벽, △한일관계 개선 등

※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뉴스룸 “2020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https://www1.president.go.kr/c/briefings>)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46대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취임식

자료 : 청와대(2020.1.14.)

-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임명장 수여, 2020.1.14.]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인선 배경을 설명하며 “**정치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심한 분열**을 만들고 있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반드시 극복**해내야 할 **과제**” 라며 ‘**통합·협치의 정치**’를 이끌어 달라고 강조
  - 또한, “현재 **대부분 나라들은 투톱체제 외교**를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는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낙연 총리에게도 대통령 전용기를 내어드리며 외교 저변을 넓혀 왔다” 며 **내치** 및 **외교에서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
  - (정세균 총리) 자신에 대해 성과를 만드는 **행정형 인물**이라며 **각 부처들을 챙기는 것은 물론 외교분야**에서도 대통령을 도와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답변

## 2020 정부 부처 업무보고 계획

자료 : 청와대(2020.1.15./1.16.)

- [정부, 2020 정부 부처 업무보고 계획, 2020.1.15.]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16일부터 2020년 2월까지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이라는 슬로건으로 기본적인 컨셉은 2020년 확실한 변화를 위해서 국민 체감 성과를 다짐하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
  - (주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직접 주재할 것이며, 2020년 1월 16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과학기술과 AI를 주제로 보고하고, 이후 강한 국방, 체감 복지, 공정 정의, 일자리, 문화 관광, 혁신 성장, 안전 안심, 외교 통일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강국, 방송통신위원회는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각각 중점 보고하였으며, 두 부처 협업과제로 미래성장을 이끄는 디지털미디어 강국에 대해 보고

## 행정안전부,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신년간담회 개최

자료 : 행정안전부(2020.1.14.)

- [행정안전부,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신년간담회\* 개최, 2020.1.14.] 2020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와 지방 4대 협의체가 2019년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신년간담회를 개최
  - ※ (참석) 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광역시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의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영광군의회의장),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회 위원장 등
- (주요 내용)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주민참여 3법\* 등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자료 : 기획재정부(2020.1.15.)

## ☐ 개요

- [홍남기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1.15.]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을 확정·발표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및 목표 ☐



## ㉔ 정책동향

- (추진 배경) 부분적·개별적인 추진으로 체계적 정책 방향 설정이나 전반적 인식 공유는 미흡한 상황으로 전담조직, 점검체계 등 추진기반이 미약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주요 제도의 실질적 내재화에도 한계
- (기본방향)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 사회적 가치를 소개하고, 공공·민간 등 사회 전반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
  - ※ 세부과제로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관운영 방식의 개선방향과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확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 (사회적 가치 개념)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가치

### ■ 13개 사회적 가치 세부 항목의 주요 의미 ■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하고,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 ㉔ 정책동향

### □ 추진 전략

#### 1.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

- 정부는 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

구분	주요 내용
<p>① 조직 구조·문화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을 위한 조직 기반 정비를 위해 정부 운영에서 보강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명문화하고, 각 기관별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책임관 등을 지정</li> <li>• 협업·참여 강화를 통한 조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벤처형 조직, 협업직원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노사 협력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단계적 도입 추진</li> </ul>
<p>②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자 역량 평가 등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장 성과계약 시 국민·근로자 보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사회적 책무를 명시</li> <li>• 채용비리 제재 강화, 균형인사 확산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포용적 인사관리 도모</li> <li>• 교육·훈련 기관 성과 진단 시 사회적 가치 교육실적을 반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 교육 확대 유도</li> </ul>
<p>③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 자율평가지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업무평가 시 배점·가점을 확대</li> <li>• 공공기관 평가 시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배점을 확대</li> <li>• 기관별 평가지표 개발 지원을 위해 세부항목별 지표 Pool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li> </ul>
<p>④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핵심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위주 10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li> <li>• 예산·기금 등 재정운용 전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지자체, 교육청 등 지역금고은행 지정 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개선</li> <li>• 참여예산 내실화를 위해 집행 모니터링단을 정례화하고, 공공조달 계약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등 조달제도를 개선</li> </ul>

## ㉔ 정책동향

### 2.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

- 민간의 사회적 가치실현 노력을 촉진·장려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구성하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

구분	주요 내용
① 기업·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B,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지속가능경영 지표 개발 등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 시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li> <li>• 민간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경영 교재 개발,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집 발간을 추진하고,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 정례화,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li> </ul>
②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수개발, 우수기관 인증, 참여포인트제 도입 등으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문제해결형 참여 촉진을 위해 광화문 1번가의 정책 속의 기능과 참여예산과의 연계를 강화</li> <li>• 지자체-지역대학 간 연계 강화, 주민자치회 확산,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 등으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li> <li>•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T/F를 운영하고,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부처협의회 및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구축</li> </ul>
③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을 통합·연계하는 등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개선</li> <li>•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형 사회적금융기관 역할 강화, 협동조합 우선 출자 제도 도입 등 사회적 금융 기반 고도화</li> <li>•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확충, 협동조합 간 연대 통한 성장을 위한 이종 연합회 설립 허용 등 스케일업 지원</li> </ul>

- [향후 계획] 문제인 정부 내 국민체감도 제고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가치별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2020년)

※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재정확보 등 지원

- 실행 목표별 세부 실행계획 및 정책 추진상황 지속 점검·관리\*

※ 추진 현황, 목표 달성, 정책효과 등을 사회적 가치 TF에서 논의

※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 부문의 추진전략 발표”

([http://www.moef.go.kr/nw/nes/nesdta.do?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nesdta.do?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자료 : 기획재정부(2020.1.15.)

### □ 개요

- [홍남기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개최, 2020.1.15.]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TF’ 는 그간 논의 결과를 종합한 「**바이오산업\*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를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상정·발표**,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바이오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5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
  - ※ 바이오산업: 인구증가 및 고령화,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이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로 생명공학 기술(biotechnology)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의 총칭
- (**추진 배경**) △바이오산업은 **사회문제 대응**과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돌파구**, △**기술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 **선도자 독식 가능** → **경쟁력 확보**가 시급

▣ 바이오산업 응용 분야 3대 분류 및 주요 내용 ▣

분류	분야	주요 내용
레드 바이오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의약: 세포치료제, 항체치료제 등 바이오 기반 의약품</li> <li>• 헬스케어: 바이오정보와 IT 기술을 융합한 의료제품·서비스</li> </ul>
그린 바이오	농업·식품·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혁신식품: 식품부문에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대체식품, 고령 친화제품, 메디푸드, 포스트바이오틱스 등</li> <li>• 생명자원: 종자, 농림·해양소재, 미생물 등 생명자원·소재</li> <li>• 식물공장: 환경조건을 제어하고 조직·세포배양 등 바이오기술을 활용하는 농작물 생산시스템</li> </ul>
화이트 바이오	화학·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연료: 바이오 알코올·디젤 등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li> <li>• 바이오리파이너리: 바이오 소재·연료 추출·가공 등을 바탕으로 바이오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공정 과정</li> <li>•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매스 기반의 고분자 플라스틱</li> </ul>

- (**기본 방향**) △기존 레드 바이오 위주에서, **자원·환경** 등 **글로벌 난제**에 대한 **대안**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까지 확대**, △R&D 투자 등 공급분야 확충 중심에서, 사업화 촉진·사회적 수용성 확대 등 **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요 측면의 시장 창출 병행** 추진, △정부·공급자 관점의 산업혁신 정책에서, **기업·시장**이 **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혁신** 및 **혁신 주체 간 협업 촉진**으로 **민간의 혁신 유도**

## ㉔ 정책동향

### □ 주요 내용

#### ▮ 바이오산업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5대 전략 분야 및 10대 핵심과제 ▮

5대 추진 전략		10대 핵심과제
R&D	<b>&lt;전략1&gt;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amp;D 혁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연구자원 고도화</li> <li>■ 공통 기반기술 및 분야별 미래 핵심기술 확보</li> </ul>	① 바이오 연구자원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② 바이오 부가가치의 원천인 미래 유망기술 확보
인재	<b>&lt;전략2&gt;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중점 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li> <li>■ 바이오산업 첨단 핵심인력 양성</li> </ul>	③ 바이오산업 우수 핵심인재 양성
규제·제도	<b>&lt;전략3&gt; 시장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선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li> <li>■ 바이오 분야 금융제도 정비</li> </ul>	④ 바이오헬스 분야 합리적 규제환경 조성 ⑤ 바이오산업 금융분야 제도 정비
생태계	<b>&lt;전략4&gt; 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화 지원 R&amp;D 강화</li> <li>■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li> <li>■ 바이오 창업·수출 지원</li> <li>■ 바이오 클러스터 효율화</li> </ul>	⑥ 바이오산업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⑦ 바이오 클러스터 재정비를 통한 지역거점 육성
사업화	<b>&lt;전략5&gt; 바이오 기반 기술융합 사업화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li> <li>■ 미래 유망 제품·비즈니스 모델 발굴</li> </ul>	⑧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 <b>⑨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활성화★</b> ⑩ 화이트바이오 초기시장 창출

○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활성화] 고령화, 건강·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사회 추세에 따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기술 활성화 필요 ⇨ 농·식품산업에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명자원 확보,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등 추진

- 맞춤형 혁신식품\*, 동·식물 치료제 등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심사 규정 효율화·기업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방안 검토

※ (예) 차세대 대체식품, 메디푸드, 고령친화제품, 건강기능성식품, 포스트바이오틱스, 농림 수산 마이크로바이옴 등

- 그린바이오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와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바이오 제품 인증제 도입·개선 및 공공부문 우선 구매제 도입 검토

☞ 「그린 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 마련(식품·자원바이오반)

## 2019년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결과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0.1.17.)

- [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결과 발표, 2020.1.17.] 2020년 1월 17일 정부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달 추진결과를 발표, 각 부처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나, 다만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서둘러 보완이 필요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정부는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2019.11.1.)에서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이행과제(28개)를 설정하여 2019년 12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중
- (농촌 배출저감) △2019년 12월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운영하여 영농폐기물 5,896톤, 농약 빈병 11.8톤을 수거, △전국 623개 마을에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을 처리

### ■ 계절관리제 28개 이행과제 목록 ■

연번	세부 과제명	연번	세부 과제명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15	미세먼지 주간예보 실시
2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16	미세먼지 중금속 성분 측정·공개
3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및 불법배출 감시·단속	17	한중 협력(공동연구, 실증사업, 정보공유 등) 강화
4	드론, 이동측정차량, 분광계 등 첨단장비 활용 불법배출 감시·단속	18	영농잔재물 집중 수거·처리
5	자발적 협약을 통한 대형사업장 추가 감축	19	불법소각 방지 홍보·교육 및 단속
6	대형사업장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	20	농어업인 매뉴얼 배포 및 교육
7	산단 인근 미세먼지 농도 측정 공개	21	선박 저속운행 실시
8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2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 제약 시행
9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23	고농도 계절 전력 수요관리 강화
10	집중관리도로 지정·관리 및 이행점검	24	유치원·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
11	대형공공장 비산먼지 감시 및 측정·공개	25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
1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26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및 고농도 행동요령 안내
13	미세먼지 쉼터 운영	27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14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28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급 및 행동가이드 교육

## 산업통상자원부, 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 발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1.15.)

- [산업통상자원부, 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 발족, 2020.1.15.] ‘데이터 3법\*’ 통과(2020.1.9.) 이후 데이터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AI·빅데이터를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정책 마련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월 14일 김용래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제조, 표준, 통상, 유통 등 각 분야의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을 발족

※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2020.1.9. 본회의 통과) ⇨ 가명정보 도입 → 통계(산업)·학술연구(과학) 등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산업지능화: 산업·에너지 전반에 AI·빅데이터를 도입하여 상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및 제조공정 혁신 등의 효과 창출

- (주요 내용) △산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면 제조업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R&D, 디자인, 조달, 유통, 마케팅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데에 공감,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공유·연계·거래·확산·표준화 등 산업지능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 국제협력·통상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 △업종별 데이터 공급·연계에 지속 노력하는 한편,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는 디지털통상 및 국제표준화에 대한 정책에도 주력하여 기업이 산업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020년에만 1,642억 원을 투입할 예정

〈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 개요〉
<p>◆ (목적)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AI·빅데이터와 산업이 결합된 ‘산업지능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 수립</p> <p>※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2020.1.9. 개정 완료)</p> <p>◆ (주요 내용) (핵심메시지)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업종별 데이터 활용이 가속화될 전망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지능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 (토론주제) ① 데이터 수집·공유·연계·거래·확산 및 표준화 방안, ② 데이터 관련 국제협력·통상 대응 방안</p> <p>- 신제품·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야 할 내용을 공유하고, 데이터 활용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검토</p>

- (향후 계획) 포럼을 정례화하여 AI·빅데이터를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지속 활용하고, ‘산업지능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

## 디지털 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TF 구성·운영

자료 : 기획재정부(2020.1.16.)

- [정부,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TF 구성·운영, 2020.1.15.]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의 중점 추진과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TF\***를 구성·운영

※ ① 데이터 경제 TF(2019.12.27. 출범): 데이터 경제 가속화, ② 디지털 정부혁신 TF(2019.12.16. 출범): 디지털 정부서비스 혁신, ③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2019.12.27. 출범): 선순환 발전 생태계 구축

- (주요 내용) 3대 범정부 TF는 **D·N·A(Data, Network(5G), AI)** 등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①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②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및 ③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

- (추진체계) △3대 범정부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및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 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 의제 발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디지털혁신비서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정책 총괄 및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정부혁신, 방송정보통신 산업 등 담당

## ㉔ 정책동향

### ◆ 농업·농촌 동향

##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15.)

### □ 개요

- [농식품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 발표, 2020.1.15.] 향후 5년간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하였으며,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 분야 26대 과제 제시**  
 ※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년~2019년)」 이후 두 번째 계획을 수립·시행

6대 분야	연도별 정책 주요 과제 추진 로드맵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동물보호·복지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물학대 처벌 강화</li> <li>외출 시에 목줄 길이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자 의무교육 확대</li> <li>기질평가 도입</li> <li>학대행위 범위 확대</li> </ul>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업 서비스업 기준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허가 영업처벌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반려동물 판매 광고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려동물 국가 자격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려동물 이력 시스템 운영</li> </ul>
③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동물보호 센터 기준 강화 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물 인수제 근거 마련</li> <li>피학대 동물구조 범위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보호소 신고제 도입</li> </ul>		
④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육단계 동물 복지 기준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물복지축산 인 증기관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송·도축 단계 기준 강화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물복지축산 인 증 범위 확대</li> </ul>	
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육동물 실험 요건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물실험계획 심의 범위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체시험법 보급 포털 구축</li> </ul>	
⑥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총조사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물복지위원회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물보호 전문 기관 구축</li> </ul>	

## ㉔ 정책동향

### □ 주요 내용

#### ■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 추진 과제 ■

비전	동물보호·복지 제도 고도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내면화	
추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 제고</li> <li>◆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서 농장동물 복지 제고</li> <li>◆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화</li> <li>◆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로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li> <li>◆ 유기동물 감소 및 재입양 활성화</li> <li>◆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li> </ul>	
추진 과제	6대 분야	26대 과제
	① 동물보호·복지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동물보호·복지 의무교육 확대</li> <li>②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li> <li>③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li> <li>④ 동물등록제 개선 및 활성화</li> </ul>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반려동물 생산·유통 환경 개선</li> <li>② 불법 영업 근절</li> <li>③ 반려동물 이력 관리 강화</li> <li>④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품질 개선</li> </ul>
	③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설보호소 관리제도 마련</li> <li>②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인력 기준 개선</li> <li>③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li> <li>④ 재난 발생 대응 역량 강화</li> </ul>
	④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개선</li> <li>② 운송·도살 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li> <li>③ 축산농가 동물복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li> <li>④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li> <li>⑤ 말·축제 이용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li> </ul>
	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및 감독 기능 강화</li> <li>②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처벌 강화</li> <li>③ 사육동물 실험 관리 개선</li> <li>④ 윤리적 동물실험 정보 보급 체계 구축</li> </ul>
	⑥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동물복지위원회 정책 심의 기능 강화</li> <li>② 동물보호·복지 R&amp;D 기획단 운영</li> <li>③ 동물보호·복지 통계·실태조사 개선</li> <li>④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li> <li>⑤ 동물보호·복지 전문기관 구축</li> </ul>

## ㉔ 정책동향

-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
  - (교육 강화)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 시 사전교육 의무화(2022)
  - (반려견 안전관리)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등 준수 의무를 강화\*(2021)
    - ※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등록 의무화,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추진 등
  -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3천만 원으로 강화\*(2021)
    - ※ 동물유기 처벌 강화도 추진(300만 원 이하 과태료 → 300만 원 이하 벌금)
  - (동물등록 활성화)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2020), 등록대상동물을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2021)
    - ※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 건전화 유도
  - (거래질서 확립) 반려동물 판매액이 일정 수준(연간 15만 원) 초과 시 영업자 등록 의무화(2021),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 금지(2022) 추진
  - (서비스 개선)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 추가(2020),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타 법령\* 조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장묘서비스 활성화 유도
    - ※ 대기환경보존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 지자체·시설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보호 전문성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 제고
  - (보호시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2020)를 거쳐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강화(2021)하고, 시설보호소 신고제 도입\*(2022)
    - ※ 시설보호소에 개체관리 의무, 안락사·분뇨처리 의무 등 부과
  - (구조·보호)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 근거 마련(2021)
    - ※ (사유예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 ㉔ 정책동향

- 사육단계, 운송·도축 단계의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을 제고
  - (사육단계) 임신돈 스톨 사육 기간 설정(기준 없음 → 6주)·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제한(2020)
  - (도축·운송단계) 소·돼지·닭 등 주요 축종의 도축·운송단계 실태조사(2020) 이후,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2021)
  - (동물복지축산 인증) 정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이 아닌 공공기관을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2021)
  - (축제이용 동물) 축제 이용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2021) 하고, 마사회의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 참여(2020)
- 동물실험을 점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역동물 동물실험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
  - (동물실험윤리위 기능강화) 동물실험윤리회 위원수 제한 폐지\*(현행 15명 이내) 및 기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한 사후점검 기능 강화, 심의내용 위반 시 실험 중지 권한 부여(2021)
    - ※ 동물실험윤리위원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지정제 도입하여 심의 절차 개선
  - (사역동물 실험) 사역동물 실험 요건\*(2020)과 처벌 기준 강화(300만 원 이하의 벌금 → 2년/2천만 원)(2022),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역동물의 복지 실태 파악 및 공개 추진(2021)
    - ※ 사역견 선발방식,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
-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등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 (동물복지위원회)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역할 수행(현행 민간 위원장), 위원 수 확대(10명 → 30명 이내) 및 관계부처 참여(2021), 광역시도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2021)
  - (전문기관) 동물보호시설·영업자 등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2023)
- [향후 계획]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 인식에 지속 대응하고자 종합계획(2020~2024년) 중간 지점인 2022년에 정책여건·추진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정·보완

##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강화로 개인재산권 보호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2020.1.16.)

- [국민권익위원회, 재산권 침해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2020.1.16.]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인한 재산권 보호 요구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전과 토지 점용료 보상, 토지 매수 등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전망

※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함(「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

- (문제점) △민원 해결을 위한 합리적 기준 미비, △소송 결과에 따른 처리로 민원 해결 장기적 지연, △체계적 처리 절차 없이 지사 차원 소극적 대응

- (개선방안) △민원 유형별 자체 판단기준 마련\*, △전국 시설 현황 파악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 △본사-지사 간 유기적 민원 해결 절차 마련\*\*\*

※ 민원 유형별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체 판단기준 마련

※ ※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농업생산기반시설 점유 권원 확보 현황 파악, 점유 권원 확보 (부당이득금 반환, 토지 매수 등)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 마련

※ ※ ※ 일관성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한 본사-지사 간 유기적 해결 절차 구축, 본사 내 농업생산기반시설 점유 권원 확보 관련 전반적 업무를 수행할 전담팀 구성 또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한국농어촌공사 대상 민원(2014~2018)(단위: 건,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한국농어촌공사 대상 민원	123	59	115	59	51	407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재산권 보호 요구 민원	31(25.2)	13(22)	39(34)	22(37.2)	15(29.4)	120(29.5)

〈주요 민원 현황〉
<p>◆ (유형 1) 사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매수 보상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인수 받은 후, 정당한 토지 점유 권원 확보 없이 개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관리</li> </ul>
<p>◆ (유형 2)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 설치에 따른 원상복구 또는 보상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농어촌공사가 민원인 토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토지사용승낙 또는 보상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고 점유·관리</li> </ul>

##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13.)

- [농식품부,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2020.1.13.]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1월 13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 금년도 총 67개 품목 판매 예정
  - (주요 내용) △기존 62개 품목 외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 신규 도입, △사과·배·단감·뽕은감 등 과수 4종의 판매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김 (~2020.2.28일까지), △열매숙기 전(前)에 발생한 재해의 보상수준 현실화, 폭염특보 발령 시 일소피해 인정 조건 명확화 등 제도개선
    - ※ (벼) 4~6월, (고랭지 배추·무) 4월 (마늘, 양파) 10~11월, (포도, 복숭아) 11월

## 농식품부, 베를린 농업장관회의 참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15.)

- [농식품부, 제12차 베를린 농업장관회의\* 참석\*\*, 2020.1.15.] 이재욱 차관은 2020년 1월 18일 베를린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해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주제로 논의
  - ※ 농식품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며, 베를린 농업장관회의(2020.1.18.)는 결과를 구체적인 정책 권고를 담은 최종 성명서(final communiqué)로 채택하며, 사전에 고위관리(SOM) 회의(2020.1.16.)에서 합의문구 조율
  - ※※ (참석) G20 포함 북미, 남미, 유럽 등 농업 장관 71명 + FAO, OIE 등 국제기구 사무총장 11여 명
  - ※※※ (주제) 2020년: 안전하고 다양하며 지속적으로 영양 공급이 가능한 식량 공급 / 2019년: 농업의 디지털화 - 미래 농업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 2018년: 축산업의 미래 - 지속가능성, 책임성, 효율성
- (주요 내용) △이재욱 차관은 세계 식량안보 제고 및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식량원조 등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소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물질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는 점을 강조

## ㉔ 정책동향

### ◆ 식품 동향

## 쌀가공식품 2019년 수출액 1억 달러 달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17.)

- [농식품부, 쌀가공식품 2019년 수출액 1억 달러 달성, 2020.1.17.] 2019년 수출 통계 실적 집계 결과(관세청, aT) 쌀가공식품의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달성하여 4년 만에 두배로 급성장
  - (주요 내용) △킵떡볶이 등 떡을 포함하는 즉석조리식품(34.3백만 달러, 전년 대비 39.4%↑), 즉석밥·냉동밥 등 가공밥류(34.7백만 달러, 전년 대비 35.9%↑)가 수출 견인, △한류 영향이 큰 미국(36백만 달러, 19%↑), 일본(16.1백만 달러, 17.8%↑), 베트남(13.1백만 달러, 25.2%↑) 등에서 수출 성장세 뚜렷
  - (향후 계획) △2020 농식품 수출 스타 품목 중의 하나로 떡볶이를 지정하여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 △ ‘쌀가공품 수출협의회’ 를 구성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상품화 지원, 박람회 특별 홍보관 운영, 소비자 체험 행사 확대, 미디어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집중 지원
  - (기대 효과)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 등 수출국 확대를 통해 수출 성장을 이끌 예정

▣ 쌀 가공식품 품목별 수출 실적(단위: 톤, 천\$, %) ▣

품목	2015		2016		2017		2018		2019(잠정)		증감률 (2018/2019)	
	종량	금액	종량	금액	종량	금액	종량	금액	종량	금액	종량	금액
쌀가공식품	33,305	55,364	40,651	67,529	41,033	72,032	48,579	89,310	53,216	106,984	9.5	19.8
쌀과자	892	3,925	1,043	6,929	942	6,771	766	6,797	560	5,580	△26.9	△17.9
곡물가공품	9,021	26,111	10,567	30,666	12,567	36,312	16,615	50,139	21,536	68,997	29.6	37.6
가공밥	4,471	13,832	5,474	17,029	6,559	20,254	8,289	25,527	10,467	34,683	26.3	35.9
떡류	4,550	12,279	5,093	13,638	6,008	16,058	8,326	24,612	11,069	34,314	32.9	39.4
쌀국수	736	1,580	764	1,489	744	1,407	739	1,382	714	1,354	△3.4	△2.0
쌀음료	7,260	6,895	13,340	11,331	12,678	10,399	16,468	13,980	16,585	14,672	0.7	4.9
식혜	975	1,058	980	1,115	1,039	1,177	1,126	1,263	1,297	1,509	15.2	19.5
아침햇살	6,285	5,837	12,360	10,216	11,639	9,222	15,342	12,717	15,288	13,163	△0.4	3.5
전통주	14,981	15,235	14,387	14,418	13,485	13,635	13,479	13,990	13,374	13,696	△0.8	△2.1
막걸리	13,893	12,902	13,654	12,868	12,904	12,247	12,850	12,413	12,792	12,205	△0.5	△1.7
약주	397	901	283	709	226	662	245	782	224	722	△8.6	△7.7
청주	691	1,431	450	841	356	726	384	795	357	768	△7.0	△3.4
기타곡물 조제품	415	1,618	549	2,697	617	3,508	512	3,022	447	2,687	△12.7	△11.1

##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20.1.17.)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2020.1.17.] 식품 수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수입건수: (2016) 625,443건 → (2017) 672,273건 → (2018) 728,114건(전년 대비 8.3% ↑)

구분	주요 내용
<b>① 유통 수입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 점검을 확대하고, 무신고 식품 판매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에 대한 점검을 강화</li> <li>•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부적합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수·폐기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소비식품: 과자류, 면류, 과일류(바나나, 오렌지, 포도 등), 수산물(고등어, 새우, 연어 등), 곡류(아몬드, 땅콩 등),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등), 건강 기능식품 등</li> </ul> </li> <li>• 수입단계 검사명령 제도를 유통단계까지 확대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을 본격 추진</li> </ul>
<b>②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식산업 확대 등으로 김치 수요가 증가*(수입김치 약 40% 차지)함에 따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를 통해 유통단계 위생취약점 등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김치 수입량(톤): (2016) 254,911 → (2017) 276,421 → (2018) 294,003</li> <li>※※ 수입김치 취급 도·소매업체,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유통단계별 보관상태 등 조사</li> </ul> </li> <li>•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식용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환경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li> </ul>
<b>③ 제도권 밖의 수입식품 안전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하여 의약품관련 위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국내 반입 및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식품안전나라 등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li> <li>•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가져오는 ‘보따리상’ 휴대반입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농산물 등을 구매·검사하여 부적합 품목에 대해 국내 반입을 차단(관세청 협업)</li> </ul>
<b>④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홍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 대상 무신고 식품 판매금지 등 예방·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신고 식품 판매 시 고발 조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시 과태료 부과(1차 30만 원 → 2차 60~3차 90)</li> </ul> </li> <li>•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대상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식품용 도안<sup>㉔</sup>) 표시제품 포함)은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위생 교육을 실시</li> </ul>

## ㉔ 정책동향

### ◆ 축산 동향

## 축산계열화사업의 관리와 축산농가 권익보호 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15.)

- [농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15.] 축산계열화사업의 관리와 축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9년 1월 11일 개정·공포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축산계열화법)」이 2020년 1월 16일 시행
  - (주요 내용) △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sup>※</sup>” 으로 사업자 관리·감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sup>※※</sup>” 로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 “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sup>※※※</sup>” 로 투명한 사업운영과 농가의 알권리 보장
    - ※ 계열화사업자는 법인요건, 고정사업장을 갖추어 시·도에 사업 등록
    -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계열화사업자 준수사항 확대, 농식품부 직권조사 및 계열화사업 등급평가제 도입 등
    - ※※※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시·도에 등록하고 농가와 계약 체결 전 제공 의무, 닭·오리고기 판매가격 공시제 시행 등

〈축산계열화사업 정의 및 현황〉			
◆ (정의) 계열화사업자가 어린 가축과 사료 등을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는 가축을 사육하여 계열화 사업자에게 다시 출하한 후 사육비용을 지급받는 사업			
◆ (현황) 육계와 오리는 사육주기(육계 32일, 오리 45일)가 짧은 특성 등으로 대부분 계열화사업으로 운영			
계열화사업자 현황			
구분	대기업 계열회사 (자산총액 10조 원이상)	중견기업 (자산총액 5천억 원 ~ 10조 원 미만)	중소기업, 조합 등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합계(103개)	7개(하림, 한강CM 등)	13개(참프레, 마니커등)	83개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20.1.11./1.13./1.15./1.16.)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20.1.16.] 2019년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없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2020년 1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강원도 화천권 및 철원군 광역울타리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7건 추가 검출<sup>\*</sup>

## ㉔ 정책동향

※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 야생멧돼지 검출현황(81건): 파주 27건, 연천 28건, 철원 19건, 화천 7건

###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현황(2020.1.17.) ▮

구분	신고	확진	시도	시군구	주소	결과	비고
1	2019.10.02.	2019.10.03.	경기	연천	신서면 도밀리 944	양성	DMZ 내
2	2019.10.11.	2019.10.12.	경기	연천	왕징면 강서리 986	양성	민통선 내
3	2019.10.11.	2019.10.12.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115	양성	민통선 내
4	2019.10.12.	2019.10.12.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25	양성	민통선 내
5	2019.10.12.	2019.10.12.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21	양성	민통선 내
6	2019.10.14.	2019.10.15.	경기	연천	장남면 판부리 150-2	양성	민통선 외(약 300m)
7	2019.10.15.	2019.10.16.	강원	철원	원남면 죽대리 산157	양성	민통선 내
8	2019.10.16.	2019.10.17.	경기	연천	왕징면 강서리 1106	양성	민통선 내
9	2019.10.16.	2019.10.17.	경기	파주	장단면 거곡리 1066	양성	민통선 내
10	2019.10.19.	2019.10.20.	경기	연천	연천읍 와초리 615	양성	민통선 외(약 1.6Km)
11	2019.10.20.	2019.10.21.	경기	연천	장남면 반정리 652-1	양성	민통선 내
12	2019.10.19.	2019.10.21.	강원	철원	원남면 죽대리 164	양성	민통선 내
13	2019.10.23.	2019.10.23.	경기	파주	장단면 석곶리 303	양성	민통선 내
14	2019.10.23.	2019.10.23.	경기	파주	장단면 석곶리 303	양성	민통선 내
15	2019.10.24.	2019.10.25.	강원	철원	원남면 죽대리 167	양성	민통선 내
16	2019.10.27.	2019.10.28.	경기	연천	연천읍 와초리 361	양성	민통선 외(약 2.2km)
17	2019.10.29.	2019.10.30.	경기	파주	군내면 백연리 398	양성	민통선 내
18	2019.10.29.	2019.10.30.	경기	파주	군내면 정자리 46	양성	민통선 내
19	2019.10.31.	2019.11.01.	경기	연천	신서면 답곡리 849	양성	민통선 외(약 1.5km)
20	2019.11.01.	2019.11.02.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39	양성	민통선 내
21	2019.11.06.	2019.11.07.	강원	철원	원남면 죽대리 167	양성	민통선 내
22	2019.11.06.	2019.11.07.	경기	파주	진동면 하포리 240	양성	민통선 내
23	2019.11.06.	2019.11.08.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313	양성	민통선 내
24	2019.11.12.	2019.11.13.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18	양성	민통선 내
25	2019.11.12.	2019.11.13.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18	양성	민통선 내
26	2019.11.20.	2019.11.21.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262	양성	민통선 내
27	2019.11.26.	2019.11.27.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80	양성	민통선 내
28	2019.11.26.	2019.11.27.	경기	파주	군내면 정자리 255	양성	민통선 내
29	2019.11.26.	2019.11.27.	경기	파주	진동면 동파리 372	양성	민통선 내
30	2019.11.27.	2019.11.28.	경기	파주	군내면 정자리 93	양성	민통선 내
31	2019.11.28.	2019.11.29.	경기	파주	군내면 정자리 206	양성	민통선 내
32	2019.11.28.	2019.11.29.	경기	파주	군내면 정자리 23	양성	민통선 내
33	2019.11.27.	2019.11.30.	경기	연천	신서면 덕산리 70	양성	민통선 내
34	2019.11.29.	2019.12.01.	경기	파주	군내면 읍내리 511	양성	민통선 내
35	2019.11.30.	2019.12.03.	경기	파주	장단면 거곡리 461	양성	민통선 내

## ㉔ 정책동향

구분	신고	확진	시도	시군구	주소	결과	비고
36	2019.12.02.	2019.12.03.	경기	연천	신서면 도신리 산 120	양성	민통선 외(약 3.3Km)
37	2019.12.03.	2019.12.04.	경기	파주	군내면 정자리 572	양성	민통선 내
38	2019.12.04.	2019.12.05	경기	파주	진동면 하포리 1236	양성	민통선 내
39	2019.12.05.	2019.12.06.	경기	파주	진동면 하포리 1214	양성	민통선 내
40	2019.12.05.	2019.12.06.	경기	철원	갈말읍 신철원리 산5-1	양성	민통선 외(약 13.3Km)
41	2019.12.04.	2019.12.06.	경기	철원	서면 외수리 산 27	양성	민통선 외(약 2.7Km)
42	2019.12.10.	2019.12.11.	경기	연천	신서면 답곡리 804	양성	민통선 외(약 2.0km)
43	2019.12.10.	2019.12.11.	경기	연천	연천읍 와초리 602	양성	민통선 외(약 1.3km)
44	2019.12.11.	2019.12.12.	경기	연천	신서면 답곡리 산245	양성	민통선 외(약 1.3km)
45	2019.12.11.	2019.12.13.	경기	연천	신서면 답곡리 1555	양성	민통선 외(약 0.27km)
46	2019.12.12.	2019.12.13.	강원	철원	갈말읍 상사리 808	양성	민통선 외(약 2.7km)
47	2019.12.16.	2019.12.18.	경기	파주	진동면 하포리 196	양성	민통선 내
48	2019.12.18.	2019.12.19.	경기	연천	신서면 도밀리 산11	양성	민통선 내
49	2019.12.18.	2019.12.22.	경기	파주	진동면 하포리 산108	양성	민통선 내
50	2019.12.20.	2019.12.22.	경기	파주	군내면 정자리 145	양성	민통선 내
51	2019.12.23.	2019.12.24.	경기	연천	신서면 답곡리 513	양성	민통선 내
52	2019.12.25.	2019.12.26.	경기	연천	신서면 마전리 1084	양성	민통선 내
53	2019.12.27.	2019.12.28.	강원	철원	갈말읍 상사리 808	양성	민통선 외(약 2.6km)
54	2019.12.28.	2019.12.29.	경기	연천	백학면 석장리 752	양성	민통선 내
55	2019.12.30.	2019.12.31.	경기	연천	신서면 답곡리 산194	양성	민통선 외(약 0.9km)
56	2019.12.30.	2020.01.01.	경기	파주	군내면 방목리 648	양성	민통선 내
57	2020.01.02.	2020.01.03.	경기	연천	중면 삼곶리 산128	양성	민통선 내
58	2020.01.03.	2020.01.04.	경기	파주	진동면 하포리 산69-1	양성	민통선 내
59	2020.01.03.	2020.01.05.	경기	연천	중면 마거리 산109	양성	민통선 내
60	2020.01.04	2020.01.05	경기	연천	왕징면 강서리 산4	양성	민통선 내
61	2020.01.04	2020.01.05	경기	연천	왕징면 강서리 산4	양성	민통선 내
62	2020.01.04	2020.01.05	경기	연천	신서면 신현리 4	양성	민통선 내
63	2020.01.06.	2020.01.07.	경기	연천	백학면 두일리 산172	양성	민통선 내
64	2020.01.06.	2020.01.07.	경기	파주	장단면 거곡리 685	양성	민통선 내
65	2020.01.06.	2020.01.08.	강원	화천	화천읍 풍산리 산269	양성	민통선 내
66	2020.01.07.	2020.01.08.	경기	연천	중면 중사리 산404	양성	민통선 내
67	2020.01.10.	2020.01.11.	경기	파주	군내면 백연리 산84	양성	민통선 내
68	2020.01.09.	2020.01.11.	경기	파주	진동면 동파리 산76	양성	민통선 내
69	2020.01.10.	2020.01.11.	강원	화천	화천읍 풍산리 산269	양성	민통선 내
70	2020.01.11.	2020.01.13.	강원	화천	화천읍 풍산리 산300	양성	민통선 내
71	2020.01.11.	2020.01.13.	강원	화천	화천읍 풍산리 산269	양성	민통선 내
72	2020.01.11.	2020.01.13.	강원	화천	화천읍 풍산리 산269	양성	민통선 내
73	2020.01.14.	2020.01.15.	경기	연천	장남면 반정리 446	양성	민통선 내
74	2020.01.14.	2020.01.15.	경기	연천	장남면 반정리 산111	양성	민통선 내

## ㉔ 정책동향

구분	신고	확진	시도	시군구	주소	결과	비고
75	2020.01.14.	2020.01.16.	경기	파주	진동면 동파리 1073	양성	민통선 내
76	2020.01.14.	2020.01.16.	경기	파주	장단면 거곡리 675	양성	민통선 내
77	2020.01.14.	2020.01.16.	경기	파주	군내면 점원리 산181	양성	민통선 내
78	2020.01.14.	2020.01.16.	강원	화천	화천읍 풍산리 산269	양성	민통선 내
79	2020.01.14.	2020.01.16.	강원	화천	화천읍 풍산리 산267	양성	민통선 외(약 3.8km)
80	2020.01.15.	2020.01.16.	강원	철원	갈말읍 상사리 396-1	양성	민통선 외(약 4.4km)
81	2020.01.15.	2020.01.16.	강원	철원	갈말읍 상사리 543	양성	민통선 외(약 4.4km)

<p style="text-align: center;">〈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2020.1.10.): 총 14건〉</p>
1)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16일 → (확진) 2019.9.17일
2)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17일 → (확진) 2019.9.18일
3)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3일 → (확진) 2019.9.23일
4)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3일 → (확진) 2019.9.24일
5)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소재 돼지농장: (예찰) 2019.9.23일 → (확진) 2019.9.24일
6)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5일 → (확진) 2019.9.25일
7) 인천시 강화군 산삼면 소재 돼지농장: (예찰) 2019.9.25일 → (확진) 2019.9.26일
8)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6일 → (확진) 2019.9.26일
9)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6일 → (확진) 2019.9.27일
10)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1일 → (확진) 2019.10.2일
1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1일 → (확진) 2019.10.2일
1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2일 → (확진) 2019.10.3일
13)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2일 → (확진) 2019.10.3일
14)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9일 → (확진) 2019.10.9일

-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ASF 고위급 국제회의 참석, 2020.1.15.]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2020년 1월 17일(한국시각 1.18일) 개최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위급 국제회의\*에 참석

※ ASF 고위급 국제회의 참석 국가 및 국제기구(단체): 독일(장관), 크로아티아(장관), 불가리아(장관), 호주(장관), 한국(차관), 일본(장관) 등 9개국(60개국 관계자 배석), EU(보건식품안전위원장), FAO(사무총장), OIE(사무총장), COPA(회장) 등 8개 기구

- (주요 내용) △한국의 ASF 사전 예방 조치와 사육돼지에서의 확산을 단기간 내 저지할 수 있었던 핵심 방역 조치를 소개, △각국 장관 및 FAO·OIE 사무총장들과 패널 토의를 통해 각국 방역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ASF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촉구

## 조류인플루엔자(AI) · 구제역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12./1.13./1.14.)

- [농식품부, 최근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발생 사전 차단방역 필요, 2020.1.13.]  
최근 유럽, 대만, 중국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재차 당부
  - (주요 내용) △폴란드는 이번 동절기에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가금농가에서 발생(9건)하였고, 연이어 인접 국가인 △슬로바키아도 발생(1건), △대만은 연중 지속 발생(2019년 99건, 2020년 12건), △중국(서부 신장지구) 야생조류(혹고니)에서는 고병원성 바이러스 검출(2건)\*
    -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보고: 폴란드(2020.1.2.~1.7., 가금농가 9건), 슬로바키아(2020.1.10. 농가 1건), 대만(2020.1.1. 이후 농가 12건), 중국(2020.1.10. 야생조류 2건)
  - (주요 상황)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내 최대치인 182만 수의 철새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고(2019.12월 기준),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안전할 수 없는 상황
    - ※ 2019년 10월 1일 이후, 8개 시·도에서 19건의 H5형 항원 검출
  - (당부사항) ①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② 취약농가(가금 종축장, 산란계, 오리) 소독 강화, ③ 계란 등 환적장 운영·관리, ④ 농가 출입차량 통제·소독 ⑤ 경작 겸업 농가 농기구 소독, ⑥ 일제 입식·출하 준수, ⑦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강화 등
- [농식품부, 구제역 감염항체(NSP) 추가 검출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 2020.1.12.]  
강화군 소재 5개 소 사육농장에서(누계: 8호, 13두에서 구제역 NSP 항체가 추가로 검출\*됨에 따라 2020년 1월 10일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방역상황에 대해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 ※ 강화군 NSP 항체 검출 총 8호(13두): (최초) 2020.1.2일 젓소농장 1호 → (반경 500m 검사) 한우 2호 → (강화군 전체 확대검사 중) 5호(한우 4, 젓소 1)
  - ※ ※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 5호 확인(과태료 대상):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인 80% 미만으로 6%(1호), 10%(1호), 56%(2호), 63%(1호)로 확인

## ㉔ 정책동향

- (주요 내용) △백신접종…금번 NSP 항체가 추가 검출된 강화군, 인접한 김포시를 대상으로 소·염소 전두수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 실시(2020.1.11.~1.23.), △소독\*… 강화군 내에 사료·가축을 운반하는 전용차량을 별도 지정하고, 김포시를 잇는 2개 대교에는 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을 설치·운영, △일제검사…국내 소 5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 농장(전국 21천호)에 대해 2020년 6월까지 구제역 NSP 항체 검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
  - ※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농장, 주변도로 및 철책 등에 대해서도 집중 소독 실시
- [농식품부, 설 연휴 대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태세 점검, 2020.1.14.]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설 연휴 대비 농식품부 차관 등 간부진이 연이어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태세를 점검
  - (주요 내용) △차량 출입이 많은 도축장, 밀집사육단지, 거점소독시설, 계란 환적장과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여 차량 통제, 소독실태 등을 점검\*, △최근 유럽, 대만, 중국 등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설 명절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량 통제와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 당부
    - ※ 점검일자, 장소: (2020.1.14.) 전남 나주 도축장·거점소독시설(차관) / (2020.1.16.) 경기 안성 계란 환적장(식품산업정책실장) / (2020.1.17.) 세종 밀집단지·거점소독시설(기획조정실장) / (2020.1.21.) 충남 당진·아산 도축장·철새도래지(차관보)
    - ※※ 2020년 들어 조류인플루엔자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대만, 중국, 인도 전 세계 6개국에서 발생, 구제역은 중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
- [농식품부, 헝가리산 가금가금육 수입금지 및 국경검역 강화, 2020.1.14.] 헝가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헝가리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의 수입\*\*\*을 2020년 1월 14일부터 금지
  - ※ 헝가리 농업부가 북서부 코마롬 에스테르콤(Komarom-Esztergom)주 소재 칠면조 농장(1농가)에서 H5N8형 HPAI가 확인되었다고 2020년 1월 13일(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 보고한 것에 따른 것
  - ※※ 헝가리산 가금 및 가금육 수입현황: (2020) 닭발, 칠면조육 2건 47톤, (2019) 닭발, 칠면조육 등 23건 248톤
- (수입 조치 대상)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
- (당부사항) △헝가리 등 HP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 △해외여행객에게 해외여행 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 **아젠다발굴** 2020년 ICT 이슈와 9대 트렌드 전망 등

### **이슈 브리프** 2020년 ICT 이슈와 9대 트렌드 전망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간한 “2020년 ICT 이슈와 9대 트렌드 전망” (IT & Future Strategy(IF Strategy), 제7호, 2019.12.3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개요>

- 2020년은 경제, 기술, 사회 측면에서 새로운 해법과 준비가 필요
  - (경제)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생산 둔화를 해결할 모멘텀 마련
  - (기술) 새로운 10년을 이끌어갈 ‘New Wave’의 시작
  - (사회) 사회 전면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준비
- 기술, 사회, 정치적으로도 글로벌 이벤트가 많아 그 어느 해보다 역동적일 것으로 예상
  - ‘5G’ 상용화 국가가 속속히 늘어나며 본격적인 5G 서비스 시작
  -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선보일 첨단기술에 세계인의 이목 집중
  - 한국·미국·영국·프랑스·폴란드 등 주요국의 선거가 몰려 있는 해로 세계 정치의 대격변이 일어날 가능성 내재
-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2020년을 앞두고 변화 추세와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여 ‘2020 ICT 트렌드’를 전망함.

#### <2020년 ICT 이슈와 트렌드 전망>

- 경제·산업·정책 등 주요 환경 변인을 살펴보고, 미래 유망기술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ICT 트렌드’를 도출

## ㉔ **아젠다 발굴**

### ▣ 2020년 ICT 트렌드 전망 프레임워크 ▣



### <미래 유망기술로 본 2020년 핵심 기술 도출>

- 다수 전망에 공통으로 포함됐거나 ICT 영향력이 큰 6개 기술: 인공지능(AI), 5G,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로봇, 맞춤 의료

### ▣ 미래 유망기술로 본 2020 핵심 기술 ▣

구분	주요 내용	주요 내용	2020년 핵심기술
Gartner (2019.10.)	• 초자동화 (Hyper-automation)	• 멀티 경험 (Multi-experience)	① 인공지능(AI) ② 5G ③ 자율주행차 ④ 블록체인 ⑤ 로봇 ⑥ 맞춤 의료
	• 민주화 (Democratization)	• 휴먼 증강 (Human Augmentation)	
	• 투명성과 추적성 (Transparency and Traceability)	• 강화 에지 (The Empowered Edge)	
	• 분산 클라우드 (Distributed Cloud)	• 자율 이동체 (Autonomous Things)	
	• 실용적인 블록체인 (Practical Blockchain)	• AI 보안 (AI Security)	
MIT (2019.2.)	• 로봇의 능력/재능 (Robot Dexterity)	• 원자력의 새로운 시도 (New-wave nuclear power)	
	• 조산아 예측 (Predicting preemies)	• 캡슐에 든 장 진단/촬영기기 (Gut probe in a pill)	
	• 맞춤형 암 백신 (Custom cancer vaccines)	• 소고기 없는 버거 (The cow-free burger)	
	• 이산화탄소 포집기 (Carbon dioxide catcher)	• 손목에 차는 심전도측정기 (An ECG on your wrist)	
	• 하수도 없는 위생시설 (Sanitation without sewers)	• 자연스럽게 말하는 AI비서 (Smooth-talking AI assistants)	
WEF (2019.7.)	• 순환경제를 위한 바이오플라스틱 (Bioplastics for a Circular Economy)	• 소셜 로봇(Social Robots)	

## ㉔ 아젠다 발굴

구분	주요 내용	주요 내용	2020년 핵심기술
	• 소형 장치를 위한 작은 렌즈 (Tiny Lenses for Miniature Devices)	• 신약 표적으로서의 구조결함 단백질 (Disordered Proteins as Drug Targets)	
	• 환경오염을 줄이는 스마트한 비료 (Smarter Fertilizers Can Reduc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 협업 텔레프레즌스 (Collaborative Telepresence)	
	• 선진 식품 추적 및 포장 기술 (Advanced Food Tracking and Packaging)	• 보다 안전한 원자로 (Safer Nuclear Reactors)	
	• DNA 데이터 저장 (DNA Data for Storage)	• 유틸리티 규모의 재생에너지 저장 (Utility-Scale Storage of Renewable Energy)	
Forbes (2019.10.)	• 서비스로서의 인공지능 (AI as a Service)	• 5G 데이터 네트워크 (5G Data Networks)	
	• 자율주행 (Autonomous Driving)	• 개인화 및 예측치료 (Personalized and Predictive medicine)	
	• 컴퓨터 비전 (Computer Vision)	• 확장 현실 (Extended Reality)	
	• 블록체인 기술 (Blockchain Tech)		
IITP (2019.11.)	• (5G) 세계 최고 도약을 향한 정면 승부	• (인공지능) 인공지능 활용의 보편화 가속	
	• (반도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2020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 (모빌리티) 新모빌리티 혁신의 전환점	
	• (규제개혁) 규제개혁을 통한 ICT 新성장 돌파구 마련	• (구독경제) ICT 新소비트렌드의 확산	
	• (노동 4.0) 플랫폼 노동과 자동화·무인화의 확산	• (친환경 ICT) 지속가능 환경을 위한 ICT 혁신	
	•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패권주의 확산으로 국내 ICT 혁신 촉발	• (新남방·新북방 정책) 對中 무역의존도 탈피 본격화	
SPRI (2019.12.)	• 자율형 IoT 기대감 증대	•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 금융권 AI 투자 본격화	• 의료 빅데이터 개방	
	• 지능형 물류 로봇 시장 성장	• eXplainable AI, xAI의 현실화	
	• 모바일 폼팩터의 혁신	• 에너지 산업의 SW융합 가속화	
	•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선점 경쟁	• 언택트(untact) 서비스 영역 확대	

출처: 각 기관에서 선정한 2020년 미래 유망기술을 종합하여 정리

### <2020년 ICT 기반 9대 트렌드 전망>

- 2020년 ICT 주요 환경 변인과 유망기술 발전 전망을 토대로 ‘9대 트렌드’ 도출

## ㉔ **아젠다 발굴**

### 2020년 ICT 주요 환경 변인

- 경제**
  -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
  - 국내 경제 성장을 둔화('20년 경제 성장률 2.3%)
- ICT 산업**
  - 세계 디바이스 출하량 감소
  - 국내 주력품목 수출·생산 부진
  - 5G 본격 확산으로 시장 경기 여건 개선 기대
- ICT 정책**
  - ICT분야 예산 증가(시 분야 예산 150%↑)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 대규모 사업 착수('20~)
- ICT 글로벌**
  - IT 서비스 기업이 글로벌마켓 밸류 주도
  - ICT 시장 트렌드: 플랫폼, 클라우드 중심
  - 핀테크, 전자상거래, 인터넷 서비스, AI 기업 성장
- 사회**
  - (2020 다보스포럼 아젠다) 신기술 리스크 관리, 사회 변화 적응
  - (2020 도쿄올림픽) 로봇 중심
  - (선거) 빅데이터, 가짜뉴스, 블록체인
- 법제도, 규제**
  -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3법
  - 전통 vs. 신산업 충돌(공유경제)
  - 미래 산업과 법제도 개선 이슈 (자율차, 바이오)

### 2020년 유망 기술

- 인공 지능**
  - 정부, 기업, 학계 투자 및 R&D 집중
  - 거의 선 분야의 AI 융합
- 5G**
  - '20년 전세계 5G망 매출액 : 약 42억 달러(가트너)
  - '25년 전세계 5G 가입건수 : 26억건 이상(에릭슨)
- 자율주행차**
  - 3단계 자율주행차 상용화('20~'22)
  - 관련 법규, 인프라 redesign
  - 기술 안전성 확보 이슈
- 블록체인**
  - 블록체인 중심의 핀테크 성장
  -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 증가
  - 중국 디지털화폐 DCEP 발행
- 로봇**
  - 로봇 형태의 지능형 기기 등장
  - '컴패니언 로봇(Companion robot)' 수요 증가
- 맞춤 의료**
  - 바이오 경제 기반 기술 발전
  - 미래 의료 국가 대규모 사업 추진 (치매극복, 의로기기)

### 2020년 ICT 기반 9대 트렌드 전망

① 새로운 10년, AI 시대의 서막(The opening of the AI era)

② 본격적인 상용화로 '산업 성장을 견인할 5G, 자율주행차'

③ 경제·산업 분야에서 '신뢰 기술로 떠오르는 블록체인'

④ 가상(가상)의 반격: '인싸가 된 가상 세계'

⑤ '개인 로봇의 부상' (PR의 시대: Personal Robot)

⑥ 미래 산업을 위해 '불필요한 적기조례(Red Flag Act)를 거둬 타이밍'

⑦ 진짜 같은 가짜 '페이크데미믹스(Fake-demics; 가짜뉴스 전염병)의 확산 경계'

⑧ 급격한 기술 혁신, '불안한 기술 위험(Tech Risk)'

⑨ 고령화에 따른 '맞춤의료 기술 수요의 급성장'

## ㉔ **아젠다 발굴**

###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기후변화 농업정책

※ 미국 National Sustainable Agriculture coalition의 “A Call for Climate-focused Agriculture Policy” (2019.11.18)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미국 기후변화 농업정책**

### <기후변화가 농가에 미친 영향>

- 미국 남부 지역 농가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음.
  - 사우스캐롤리나주, 조지아주의 복숭아 농가, 플로리다주의 감귤 농가, 조지아주 비달리아의 양파 농가 등은 기록적인 낮은 온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음.
- 기후변화의 변동성 확대는 곡물 단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축산농가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확대해 미국 농업 경제를 악화시킴.

### <농업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

- 농업은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온실가스, 아산화질소(N<sub>2</sub>O) 배출로 기후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아산화질소는 토양으로부터 비료나 개간 작업을 통해 배출되는데, 미국환경보건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의하면, 2017년 미국 총 아산화질소 배출량의 74%가 농업토양으로부터 배출됨.
  - 온실가스는 미국의 공장식 밀집 사육(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CAFOs)에서 나온 물거름(liquid manure)을 통해 다량 배출됨.
  - 또한, 토양에 탄소가 다량 저장되어있는 숲이나 초원을 경작지로 개간하면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침.

## ㉔ **아젠다 발굴**

###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정책>

▮ 미국 지속가능 농업연맹이 제시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정책 ▮

- ① 농업 기후 중립적 생산을 목표로 한 생산자 지원
- ②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방해하는 요소는 제거하고 향상시키는 요소에 대한 지원 확대
- ③ 아산화질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경영 지원
- ④ 쓰레기와 유기성 폐기물의 물거름을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정책 지원
- ⑤ 탄소가 많이 저장된 토양이나 지형을 보호하는 제도 개편
- ⑥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과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공장식 밀집 사육에 대한 지원 철폐와 환경친화적인 가축생산시스템 지원
- ⑦ 농업 내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 정책 지원
- ⑧ 환경에 민감한 농업에 대한 식물·동물 육종 연구 지원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생산자조직 발전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Factors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Producer Organizations and their Impacts in the Light of Ongoing Changes in Food Supply Chains (2016.5.)” 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생산자조직 발전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 **생산자조직**의 **설립**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적·사회적 자본**, **네트워킹**, **다른 조직원 간 관계**, **규제 실효성** 등이 있으며, **규모가 큰 농가**가 작은 농가에 비해 **생산자조직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존 연구들은 i) **민간**과 **정부** 중 **누가 생산자조직**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지**, ii) **생산자조직 활성화**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㉔ **아젠다 발굴**

- 많은 연구에서 **생산자조직**이 **농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였으나, **반대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도 **상당수 존재함**.
  - 특히 **협상력 제고** 측면에서 **생산자조직**에 따른 **편익**은 **시간·장소·기술·품목·규모·사회적 자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 **생산자조직**이 **계약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으며, **소규모 농가**가 **생산자조직**에 **참여**하게 하는 **결정요인**, **유통과정**에서 **협상력 결정요인**, **불공정 거래 관행**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단체 행동**에 따른 **높은 거래비용**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한 경우(예: 계약집행, 잘못된 정보 전달) **생산자조직**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정당화**될 수 있음. 단, 정부 지원으로 조직 형태가 왜곡되어서는 안 됨.
  - **생산자조직**을 통해 **농업인 협상력**이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정책 지원은 **생산자조직**이 **경쟁규정**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며, 지원으로 인해 **시장지배력 남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생산자조직 구조**를 특정 형태로 제한하기보다는 **다양한 조직 형태**와 **지배구조**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직 설립**에 따른 **편익**은 **시장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더욱 크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생산자조직**에 따른 이득은 **과일, 채소, 낙농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는 **생산자조직**이 **생존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해당 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함. 즉 단순히 **생산자조직 수**를 늘리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 **생산자조직 설립**은 유통업자가 상대해야 하는 **생산자 수**를 **감소**시켜 **거래비용** 측면에서 **유통업자**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음.

## ㉔ **아젠다 발굴**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제5기 중산간지역등직불제 시행

※ 일본농업신문 「中山間直払い第5期対策 返還措置の面積緩和 耕作放棄発生分だけ」(2020.1.15.), 일본 농림수산성 「中山間地域等直接支払交付金 令和2年度予算概算要求の概要」(검색일, 2020.1.1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제5기 중산간지역등직불제\* 시행**

※ 경사지가 많아 생산조건이 불리한 농지에서 5년 이상 농업 생산활동을 할 경우 조건에 따라 교부금이 지급됨. 중산간 지역 휴경지 발생을 방지하여 적절한 농업 생산활동 유지를 통한 다원적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0년부터 중산간지역등직불제 제5기 대책을 시행함.**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간지역 농지 7만 5천ha의 휴경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임.**
  - 제5기 대책에서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뚜렷한 중산간 지역 등에서 농업 생산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 **2020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261억 엔**으로 **대상 면적을 유지·확대**할 수 있을지가 **과제**임.
- **현행 기준 휴경지가 발생한 경우, 협약한 시점부터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 직불금 반환을 우려하여 협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 2020년부터 규칙을 바꿔 **휴경지 면적 분**에 한하여 **협약체결 시점부터 수령한 직불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변경함.
- **현행 기준 직불금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① **농작업위탁** 등에 의한 **휴경지 발생 방지, 야생동물 대책** 등의 농업생산활동 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해당 조건만 이행 시 직불금의 80%만 지급), ② **농기계 공동이용** 등 **장기적으로 생산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 정비 활동**(해당 조건까지 이행 시 직불금의 100% 지급)의 조건이 있었음.
  - 제5기 대책에서는 **체제 정비 활동 조건을 6~10년 후 마을 미래상 명확화·공유**하는 **지역전략을 작성**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함.

## ㉔ **아젠다 발굴**

- 새로운 인력 확보, 영농 이외의 조직과 연계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기능 강화 추가지급금**, 농지 단지화·규모화 및 소득향상, 드론을 이용한 약제 살포 등의 노동력 절감기술을 도입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생산성·부가가치향상 추가 지급금을 신설하여 각각 단위면적당 3,000엔을 지급함.**
- **광역 지역협정**을 맺어 **지역유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집락협정광역 추가 지급금조건을 완화**하였음. **복수지역**에서 **지역협정**을 맺는 경우 **단위면적당 3,000엔을 지급**하며, **계단식 논 지역진흥법**의 **성립**에 따라 **지정 계단식 논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하였음.

### **언론 동향**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주요 동향**

※ 아젠다 발굴을 위해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㉕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주요 동향**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오는 **2020년 2월 25일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2020년 1월 13일 ‘중점연구용역 보고 및 토론회’**를 열어 **농정 예산 개편** 등 농특위가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를 듣고 의견을 공유
  -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은 “올해는 농정 틀 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농정 틀 전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농특위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부처가 구체적 실행계획**과 **예산**을 짜는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 ※ 지난해 2019년 12월 12일 개최된 ‘2019 농정틀 전환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농정틀 전환의 필요성과 5대 중점과제를 직접 언급한 만큼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5월 전에 새로운 농정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마련, 구체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
- 농특위는 현재 **농정 틀 전환의 중점 과제**로 △**농정 예산구조 개편**, △**농정 추진체계 개편**,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 등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
  - (**농정 예산구조 개편, 이명현 인천대 교수**)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여전히 ‘산업육성’ 중심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증가를 자극하는 투입재 중심의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다기능성 제고 부문**으로 **농업 예산**이 충분히 **이동돼야** 한다”고 강조

## ㉔ **아젠다 발굴**

- (농정 추진체계 개편,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재분담하고, 단계적으로 의사결정 및 집행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며 “이미 논의되고 있는 농촌 분야 계획협약제도를 통해 포괄보조 방식으로 재정을 이양하되 지역 내부의 농정 추진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고 설명
- (공익직불제 개편,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 마련됐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면서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농업과 연계된 활동뿐만 아니라 농촌생활환경, 문화유산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선택형 직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고 제안
-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장)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현시점이 정책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정리하기에 적합한 시기” 라며 “공익성을 개편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
- (김태연 단국대 교수) “따라서 공익직불제가 추구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환경, 경관, 토양, 수질, 생태계 및 역사유적과 문화 보전을 지향하는 것으로 명확히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공익직불제는 농업생산 활동을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공익형 영농활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 라며 “이에 현재 3% 내외에 불과한 친환경농업직불과 경관보전직불 등 기산형 직불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 고 주장
-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올해는 기본형직불을 정착시키는 해로 만들기 위해 세부시행방안을 검토 중” 이라며 “가장 큰 고민은 준수 의무로, 공익 증진을 위해선 여러 준수 의무가 필요하나 자칫 농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농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마련하겠다” 고 전해
- 토론회에서는 기존 보조사업 예산을 감축해 직불금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실제 투입재 보조사업 예산이 많지 않고, 감축 과정에서 현장 농민 등의 반발이 거셀 것이란 신중론도 제기
-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예산의 구조를 바꾸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 예산 편성과정에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당면과제인 게 현실” 이라며 “그럼에도 예산구조 변경에 대한 농업현장의 요구가 응집된다면 국회·기획재정부 등에 정치력을 발휘하는 요소가 될 것” 이라고 언급

## ㉔ **아젠다 발굴**

-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 “농업예산은 농가 소득보전이란 명분보다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공익기여지불이란 관점에서 지출을 늘려가야 한다” 며 “구체적인 목표치는 향후 로드맵에 따라 정해야겠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공익기여지불 예산이 전체 농업예산의 30%\*에 이르기를 바란다” 고 언급
  - ※ 한편, 농특위는 정부의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2020년 3월 말에 확정되는 점을 감안, 2020년 2월 말까지는 예산구조 개편방안을 내놓을 계획
-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2020년 1월 14일 종로구 농특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농수산물의 가격 및 경영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며 “공익기여지불 중심의 예산과 더불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 이라고 언급
  - 그는 이어 “특히 변동형 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른 농가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안정대 정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고 언급
  - 공익직불제에 대해선 “농어민에 대한 생산 보조금과 농어촌에 대한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개발 보조금을 대폭 줄여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 늘어나는 농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공익기여지불로 돌려야 한다” 고 강조
  - 또한, “올해에는 농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이뤄져 불법적 농지소유를 막고 임차농민의 농지 이용권을 보장해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누가 농민이고, 어민인가, 농어촌 주민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새롭게 정립되지 않으면 공익기여지불 중심의 농정으로 재편되기는 어렵다” 고 설명
  - 한편,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푸드 플랜과 지역 푸드 플랜을 올해 내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특히 지역 푸드 플랜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
  - 아울러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농어촌 활성화 정책 수립, △농어촌 인구 20% 확보,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 △농어촌 주체의 혁신 역량 개발, △농어촌 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우루과이 라운드 이래 30년간 우리 농정을 지배해온 효율과 경쟁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을 극복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지속가능 농정을 통해 국민총행복에 기여하는 새로운 농정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

## ㉔ **아젠다 발굴**

- 그는 “**농어민과 소통**할 뿐 아니라 **소비자, 환경단체, 노동계** 등 **시민사회**와 **진밀하게 소통**해 **농정 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과도 **책임 있는 합의**를 이뤄야 하며, 올 한 해 **사회협약**의 **구체적 내용**에 **합의**하고 이것이 내후년부터 시작될 **대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다고 부연 설명

자료: “농특위원장 “농수산물 가격안정, 국가 책무 분명히해야” ” (NEWSIS, 2020.1.14.), “공익직불제, 선택형직불 중심 개편·확대 추진을” (농수축산신문, 2020.1.14.), “농특위 “5월 전 농정 전환 구체적 로드맵 마련” ” (한국농어민신문, 2020.1.14.), “농정예산, 농업의 공익성 꺾고·환경 보전 위한 개편을” (농민신문, 2020.1.15.), “[현장포커스]농특위 ‘농정의 틀’ 전환 로드맵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0.1.15.), “공익직불제 중심 농정틀 전환 토대 마련” (내일신문, 2020.1.16.)

## 통계·조사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0.1.15.)

### 개요

- [국무조정실,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2020.1.15.] 국무조정실은 2020년 1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
  - (평가)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9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으로,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5단계\*\* (S·A등급 30%, B등급 50%, C·D등급 20%)로 부여하였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2020.1.10.)
    - ※ 일자리·국정과제(65) + 규제혁신(10) + 정부혁신(10) + 정책소통(15) + 지시이행(±3)
    - ※※ 3등급(A 30%, B 50%, C 20%) 배분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A그룹·C그룹 내 점수 편차 및 탁월한 성과 창출 여부 등 고려, S/D등급 부여 (S·A·B·C·D)

### 각 부문별 평가결과에 따른 주요성과

#### 1.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 세계최초 5G 상용화, 벤처투자 4조 원 돌파, 신규 유니콘 기업 5개 탄생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력산업 활력(조선수주, 반도체 1위 등)을 이어가는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
- 대규모 공공·민간 투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고용률·상용직 증가 등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였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영세자영업 지원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의 토대를 마련
- 기초·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MRI 등)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고, 아동수당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보육·교육의 포용성을 강화

## ㉔ 통계·조사

- 공수처 설치법 제정·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지속적인 적폐청산 등으로 국가 청렴도(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점)를 높이고, 독립유공자 지원 등 나라를 위한 희생·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국세의 지방세 전환(3.3조 원) 등 지방분권을 추진하였고, 생활SOC 확충(8.6조 원), 도시재생뉴딜(116곳)·어촌뉴딜300(70곳), 쌀값 안정화 및 쌀 관세율 유지(513%)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뒷받침
-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신남방정책 추진을 가속화 하였으며, 서해 5도 어장을 확장하고, DMZ 평화의 길 조성 등 평화체험의 장을 마련
- 반면, 공유경제 등 혁신성장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타협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은 다소 미흡
- 사회 각 부문에서의 특권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정경제·자치분권 등 개혁 입법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

## 2. 규제혁신 부문

- 先허용-後규제 패러다임의 확산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적용대상을 확대
  - 특히,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 정착으로 당초 목표인 100건을 넘어 195건을 달성하였고, 일부 사회적 갈등 과제에 대한 돌파구\*를 제시
    - \* (국토교통부) 택시동승 중개서비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유주방, (문화체육관광부) 공유숙박 등
- 규제개선 방식도 정부가 직접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를 확대 적용\*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
  - \* 전 부처, ‘정부입증위’ 구축 완료(2019.3월) / 건의과제·행정규칙 대상 총 1,017건 규제개선
-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성과 창출\*을 뒷받침
  - \* (국세청)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수제맥주 키트 제조회사에 주류 제조업 면허 발급
- 다만, 공유경제 등 과급효과가 큰 핵심규제 해결을 위한 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고,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경직적인 규제해석 관행을 타파해 나가야 할 필요

## ㉔ 통계·조사

### 3 정부혁신 부문

- 사회적가치 및 참여·협력의 강조와 적극행정 추진 등에 따라 정부신뢰도가 2년 만에 10단계(2017년 32위 → 2019년 22위, OECD) 상승
-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임신, 출산, 상속 등) 통합서비스 확대,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증진
  - ※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복지 위기가구, 학교 밖 청소년
  - ※※ (환경부)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패턴을 분석, 이상 감지 시 지자체 자동통지(840가구)
- 환경·안전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 참여를 통한 리빙랩 R&D 추진(미화원과 야간작업복 개발 등)
- 다만, 국민참여가 단순 의견수렴·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
  - ※ 국민참여 범위: 의견수렴(40%), 심의(22%), 자문(13%) 순(2019.9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4 정책소통 부문

- 기관장의 언론 직접홍보 및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신뢰를 제고하였고, 일본 수출규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범정부 현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 홍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
  - ※ 기관장 현장소통(월평균): 장관급 기관 18.9회(전년 15.8회 대비 19.6% 증가), 차관급 기관 7.9회(전년 5.7회 대비 38.6% 증가)
- 디지털 소통팀 구성을 확대(2018년 13개 → 2019년 31개 중앙행정기관)하였고, 채널 다변화, 디지털 콘텐츠 증가 등을 통해 디지털 소통을 활성화
- 다만, 단발성 협업 홍보를 넘어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속 홍보하고, 인기 캐릭터 활용 등 파급력 있는 핵심 콘텐츠 위주의 홍보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제고할 필요

## □ 평가결과

## ㉔ 통계·조사

- 국정과제에서 **우수 성과**를 창출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낮은 평가**
  -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차단 및 농가소득 안정(농식품부)**  
 △미래성장동력 육성(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조달청)  
 △서민생활 안정 및 가계부담 경감(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 2019년 정부업무평가부터 **5등급제**(기존 3등급제)를 실시하였으며, **농식품부\***는 **평가** **주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기관종합 S등급**으로 선정
  - ※ 농식품부는 4대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고 정책만족도도 우수, 정평위를 통해 S등급 부여
  - 부문별로는 **규제혁신 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등급**, **교육부**가 **D등급**으로 선정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
  -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미흡사항, 100대 국정과제별 실적·미흡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
  - 또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
  -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도 평가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
  -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

### ㉔ 2019년 정부업무평가 기관종합 평가결과(직제순) ㉔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S	농식품부	-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B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청, 해양경찰청
C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방위사업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D	-	-

##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자료 : 기획재정부(2020.1.14.)

### □ 개요

-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월 13일(미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발표
  - ※ 美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 주요 내용

- **[종합 평가]** 美재무부는 금번 환율보고서에서 **對美 교역액이 400억 달러 이상인 20개국**에 대해 **평가**(평가대상 기간: 2018. 下~2019. 上)
  - **중국**(지난 8월 환율조작국 지정)을 **조작국**에서 **해제\***
    - ※ 이는 1단계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경쟁적 통화 절하 자제 등을 약속하고, 환율 등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결정
  - 다만, 중국의 수출, 투자에 대한 **의존 완화** 및 **내수부양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가계소비 진작** 등을 위해 **구조개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은 종전 9개국에서 **1개국**(스위스)을 **신규 추가\*\***하여 **10개국**을 지정
    - ※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요건(① 對美 무역흑자 200억 달러, ② 경상흑자 GDP 2%, ③ 외환순매수 GDP 2%) 중 2개 충족 또는 과도한 對美 무역흑자국
    - ※ ※ 對美 무역흑자(218억 달러 > 200억 달러), 경상흑자(GDP 10.7% > 2%) 요건 충족
- **[우리나라 평가]**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여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對美 무역흑자: 203억 달러**) 운송장비 등 對美수출 확대 등으로 2019.5월 보고서 (180억 달러) 대비 확대, 對美서비스 적자 감안 시 112억 달러 수준

## ㉔ 통계·조사

- (경상수지 흑자/GDP: 4.0%) 2019.5월 보고서(4.4%)에 비해 축소
- (외화 순매수: 80억 달러 순매도, 0.5%) 원화절하에 대응하여 외화 순매도 개입 실시
- [우리나라 정책 권고 등]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 및 공개 주기 단축\* 등 우리 정부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 2019.1.1.까지는 반기별 공개 → 2019.3분기부터는 분기별 공개로 확대
- 아울러, 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2020년 예산편성(총지출 증가율 9.1%)을 바람직하다고 평가

## ㉕ 주요국 평가결과

- 中환율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20개 국가\*를 평가
  - ※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스위스, 캐나다, 인도, 한국, 태국, 프랑스, 대만, 영국, 싱가포르, 브라질, 벨기에, 네덜란드(對美 무역 흑자 순)
- 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으며, 2개 이상 충족 7개국과 1개 충족한 3개국(中 포함)을 관찰대상국 분류
  - (韓·日·獨·이탈리아·말련·스위스) 對美 흑자 + 경상흑자 요건 충족
  - (싱가포르) 경상흑자 + 시장개입 요건 충족
  - (아일랜드·베트남) 3개 요건 중 1개(아일랜드·베트남: 對美 흑자)만 충족했으나, 관찰대상국에 잔류\*
    - ※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두 번의 연속된 보고서에서 심층분석대상국 기준 3개 중 1개 이하 충족 필요(최초로 1개 이하 충족 시에는 관찰대상국으로 유지)

㉔ 통계·조사

▣ 주요국 평가 ▣

국가	현저한 對美 무역흑자 對美 흑자 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 경상흑자/GDP 2%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순매수/GDP 2% 초과 + 6개월 이상 지속	충족된 요건수	2019.5월 보고서 대비
중국	4,010억 달러	1.2%	△0.3%	1개	동일
일본	690억 달러	3.4%	0.0%	2개	"
독일	670억 달러	7.3%	-	2개	"
아일랜드	500억 달러	△0.8%	-	1개	감소
베트남	470억 달러	1.7%	0.8%	1개	감소
이탈리아	330억 달러	2.8%	-	2개	동일
밀런	260억 달러	3.0%	△0.3%	2개	"
스위스	220억 달러	10.7%	0.5%	2개	신규
한국	200억 달러	4.0%	△0.5%	2개	증가
싱가포르	△40억 달러	17.9%	9.0%	2개	동일
멕시코	930억 달러	△1.0%	0.0%	1개	동일
캐나다	210억 달러	△2.2%	0.0%	1개	"
인도	210억 달러	△2.0%	△0.6%	1개	"
태국	190억 달러	5.3%	1.5%	1개	"
프랑스	190억 달러	△0.7%	-	0개	"
대만	180억 달러	11.0%	0.1%	1개	"
영국	△40억 달러	△5.0%	0.0%	0개	"
브라질	△90억 달러	△2.4%	△0.5%	0개	"
벨기에	△140억 달러	△1.3%	-	0개	"
네덜란드	△240억 달러	10.3%	-	1개	"

※ (진한 글씨) 관찰대상국 / (빨간색 글씨)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㉔ 통계·조사

## FAO 식량가격지수(2013년~2019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13.)

연도	식량가격지수	육류	유제품	곡물	유지류	설탕	
2013	209.8	184.1	242.7	219.3	193.0	251.0	
2014	201.8	198.3	224.1	191.9	181.1	241.2	
2015	164.0	168.1	160.3	162.4	147.0	190.7	
2016	161.5	156.2	153.8	146.9	163.8	256.0	
2017	1월	174.6	158.8	193.0	146.9	186.3	288.5
	2월	175.5	161.2	194.2	150.5	178.7	287.9
	3월	171.6	165.2	189.8	147.8	167.6	256.5
	4월	168.9	169.3	183.6	146.0	161.1	233.3
	5월	172.9	172.7	193.0	148.0	168.7	227.9
	6월	175.3	175.6	209.0	154.3	162.1	197.3
	7월	179.0	174.9	216.6	162.2	160.4	207.5
	8월	177.2	174.3	219.7	153.0	164.4	203.9
	9월	178.6	174.0	224.2	151.9	171.9	204.2
	10월	176.5	173.1	214.8	152.7	170.0	203.5
	11월	175.7	172.8	204.2	153.1	172.2	212.7
	12월	169.1	169.7	184.4	152.4	162.6	204.1
	(평균)	<b>174.6</b>	<b>170.1</b>	<b>202.2</b>	<b>151.6</b>	<b>168.8</b>	<b>227.3</b>
2018	1월	168.4	167.5	179.9	156.6	163.1	199.9
	2월	171.4	170.3	191.1	161.3	158.0	192.4
	3월	173.2	171.0	197.4	165.4	156.8	185.5
	4월	174.0	170.4	204.1	168.5	154.6	176.1
	5월	175.8	168.7	215.2	172.6	150.6	175.3
	6월	172.7	166.5	213.2	166.8	146.1	177.4
	7월	167.1	165.2	199.1	161.9	141.9	166.3
	8월	167.8	166.8	196.2	168.7	138.2	157.3
	9월	164.5	163.8	191.0	164.0	134.9	161.4
	10월	162.9	160.4	181.8	165.7	132.9	175.4
	11월	161.8	162.6	175.8	164.1	125.3	183.1
	12월	161.5	162.4	170.0	167.8	125.8	179.6
	(평균)	<b>168.4</b>	<b>166.3</b>	<b>192.9</b>	<b>165.3</b>	<b>144.0</b>	<b>177.5</b>
2019	1월	163.9	160.1	182.1	168.7	131.2	181.9
	2월	167.0	162.7	192.4	168.5	133.5	184.1
	3월	167.6	164.5	204.3	164.7	127.6	180.4
	4월	170.7	170.9	215.0	160.1	128.7	181.7
	5월	173.8	174.3	226.1	162.3	127.4	176.0
	6월	173.2	176.4	199.2	173.5	125.5	183.3
	7월	171.8	178.9	193.5	168.8	126.5	182.1
	8월	169.7	179.6	194.5	157.8	133.9	174.8
	9월	169.2	179.6	193.4	157.4	135.7	168.6
	10월	172.0	180.7	192.0	164.3	136.4	178.3
	11월	177.3	191.0	192.6	162.1	150.6	181.6
	12월	<b>181.7</b>	<b>191.6</b>	<b>198.9</b>	<b>164.3</b>	<b>164.7</b>	<b>190.3</b>
	(평균)	<b>171.5</b>	<b>175.8</b>	<b>198.7</b>	<b>164.4</b>	<b>135.2</b>	<b>180.3</b>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